

토와 체질에 맞는 품목, 품종을 무공해로 재배해냄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약한 점을 우수한 품질 경쟁력과 안전성으로 겨뤄 이기도록 해야 한다.

수입개방에 즈음하여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 농어촌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16조원의 내역도 우선 농축수산업의 위와 같은 방향의 보강에 훨씬 많은 비율이 투자되도록 재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부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민을 서두에서 지적한 다섯가지 시나리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적 산업으로 존립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먼저 물어 거국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제2의 방위세 또는 교육세와 같은 「농업보상세」를 신설하여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 대폭적인 수입개방 조치에 즈음하여 농촌종합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까지 토의한 맥락에 비취 그 방향이라든지 투자배분이 획기적이라 말하기 아주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미흡하나마 이들 종합대책에 대하여 농어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이다. 신뢰를 얻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왜 무의미하다고 단언하는지 명확하다.

따라서 최고통치권자가 정부

약속 형식의 담화 또는 문서발표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통령 직속하에 「농업·농민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전문가집단의 기구가 농어민대표의 활기찬 참가하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성실과 믿음이 결여된 5공화국식 농정으로는 깊이 새겨진 불신의 골을 메울길 없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정권, 이 정부는 우리 농어민에게 살 길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우리나라 농어민에게 심어 주는 과제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또 있는가.

농업의 국제화와 축산업의 조정방향

허신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축산은 농업의 한 분야이자 국민경제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기에 축산 및 농업은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는 국제경제사회의 변화로부터 민감

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축산업은 축산 내부만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변화 내지 문제와 모두 연결

되어 변하기 때문에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로부터 살펴볼 수 없다. 그러한 진단 위에서만 한국축산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여건의 변화

첫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는 개별 국민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따른 국제화 내지 개방화의 도도한 물결이다. 주로 기술의 혁신에 따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거대한 지구 자체가 마치 하나의 촌락처럼 변화하면서 국제분업과 자유무역을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자유무역도 시간의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축산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면 축산물 생산의 국제분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토지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젓소와 비육우 등 초식가축의 생산분야에서 생산의 유리성을 확고부동하게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처럼 희소한 토지자원을 가진 반면에 자본과 기술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양돈이나 양계, 명크, 오리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축산물의 생산이 유리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희소한 국가 사이에도 축산물의 교역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여건 변화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따른 상호주의 무역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제3의 물결인 정보 및 기술사회를 맞이하여 일본·한국·중국을 이은 동북아시아가 열리게 되자 세계의 주요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블록화 현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1988년 1월 자유무역지역(FTA)을 형성하였고, EC의 12개국도 1992년에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을 하며, 아세안 6개국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중동과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블록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마저 동북아시아지역으로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블록화의 추세는 한국의 공산품 수출확대를 어렵게 만들면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세력으로 눈뭉치듯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경제권에서는 곡물과 초식가축 등 토지조방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늘리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EC에서는 유제품과 돼지고기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세안 6개국은 바나나와 다른 열대

과실은 물론 심지어 곡물의 수입개방압력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심지어 북방정책의 주대상국인 소련과 중국까지도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블록을 만들어 교역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수출한만큼 수입해 가도록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대상이 주로 농산물이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과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견된다. 고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블록화 추세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생산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수입확대에 대한 보완대책의 비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농가소득의 위축과 직결되며,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마저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여건 변화는 한국경제 자체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부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4회 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잘 치러냈다는 대외적인 인정과 그에 부응한 경제력 이외에도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요구는 격증되기 시작하였다. 몇가지 예를 들면, 1988년 11월1일 IMF 8조국의 이행에 따른 통상

및 자본거래의 추진의무, 1989년 6월에 있을 GATT BOP 협의회의에 의한 18조 농수산물 수입규제적용의 한계, 향후 1~2년 사이에 있을 지도 모를 OECD 가입에 따른 자유무역의 실천의무 등 지금까지의 보호우산은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후진국 내지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까지 제공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함에 따라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교역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고립은 물론 수출시장의 확대가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 정부가 농업보다 이런 국제관계에 비중을 더 두는 경우 농업부문은 「경제개발의 희생물」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특히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량제한”을 과할 수 있는 GATT 제18조 B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금 남아 있는 400여개의 농수산물 수입규제 품목은 최소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사태가 도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싫으나 좋으나 비자발적인 수입확대를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은 주로 우리나라

의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들 국가의 주산물은 대체로 토지조방적인 곡물이나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 즉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대미흑자를 크게 발생시키면 시킬수록 그에 따른 개방압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곡물과 쇠고기 그리고 오렌지 등의 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이 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쇠고기의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점진적 개방일정을 제시하되 당사국들과의 쌍무협정을 벌이도록 권고”하는 GATT 쇠고기 패널의 판정결과가 있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감안할 때 앞으로 쇠고기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 내지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네번째로 지적코자 하는 여건변화는 주요 수출국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산이 과잉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료 이후 각국들이 식량의 안보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온 기술의 혁신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85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물론 과거의 만성적인 수입국이던 유럽의 EC 회원국들까지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수입국들도 잔유품목의 생산과잉을 경험하였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농업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인 농산물의 과잉생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보아 선택은 두가지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농산물 생산의 과잉국들이 감산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확대시켜 식량의 부족국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주요 수출국들의 농산물 감산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위축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지배적인데 반해서 후자의 농산물 무역확대를 선택하는 경우 경제위축이 아니라 확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최소한 선진제국의 지도자들은 믿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86년의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각종 농업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의 자유무역지향적인 움직임이다.

농산물의 생산이 과잉되면 단위당 생산원가가 낮아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덤핑수출이 늘어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일수록 덤핑현상은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날 조짐이고 보면 자본·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입물량의 급증될 위험이 다르다. 벌써 주요 식품판매점에서 덴마크산 돼지고기의 통조림이 350g 당 800원에 소매되고 있음을 주의깊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경제여건의 변화이다. 식품 소비형태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서 곡물 중심으로부터 고급 농산물, 특히 축산물의 소비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육류의 소비는 물론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도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공업원료까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업 자원이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급 농산물의 생산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급의 불균형마저 심화된다.

2. 축산부문의 조정방향

농업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분명하게 조정해야 할 것은 축산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작업이다.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좌초되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의 증대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생산체계를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정을 시도할 필

요가 있다.

가. 비육우의 고급육화

일반 쇠고기의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자원의 제한과 고지가로 인하여 앞으로도 생산의 유리성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그래도 개방화시대가 우리가 한가닥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영역은 한우육의 고급화에 있다. 일본의 화우와 같이 품종의 개발과 육질의 고급화를 통해 수입육이 국산육과 질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할 수 없겠끔 만드는 일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한우육의 고급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첫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쇠고기 생산은 주로 다두사육의 방목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 및 자본·기술집약적인 고급육의 생산에서는 이들국가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급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이용한 수입육의 소비를 기피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나. 낙농의 적정규모화와 원유가 차별정책실시

낙농 호당평균 젖소의 사육두수는 1989년 3월 기준 13.5두에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결과 밝혀졌지만, 좀더 규모를 늘림으로써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물론 젖소의 사육두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에 따른 충분한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에 규모의 확대가 바람직하면서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결국 한국 낙농업의 장래는 초지조성 등 조사료 기반을 얼마나 가지게 될 것이며, 그 기반이 어느 정도 효율화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산과 밭 그리고 천수답을 포함한 농용지를 마치 도시를 재개발하듯이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낙농의 규모화와 생산성의 향상이 가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앞서기 힘들 것이다.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축산물 가운데 하나가 유제품이 될 것이다. 버터나 치즈는 수입하기 용이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덩핑마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제품업계는 아직도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원유가로 인하여 유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

유선의 일원화를 선행시킨 다음에 원유의 위생 및 용도에 따른 차별 가격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 양돈의 수출산업화

세계가 하나로 통합, 개방화의 물결이 넘쳐 흐를수록 축산분야에서도 국제분업은 점차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자본·기술집약적인 양축업은 우리나라의 주종 농산물중 하나로 등장, 수출의 가능성을 높혀 줄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덴마크와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대국, 일본을 가까운 이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일돈육수출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수요가 고급부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들 고급부위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출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돼지고기의 생산공급체계를 연중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돼지가격의 안정화에 경쟁력이 높은 전기업 양돈가로 하여금 품종개량사업 및 수입분야를 담당케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중소양돈농가로 하여금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영역의 분

담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 양계산업의 계열화

양계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우리 나라가 생산의 유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의 덤핑수출이 항상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양계산업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물의 수출도 가능하겠지만 부패성과 수송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계산업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산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안정하면 외국의 수출상사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교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화와 사육 그리고 도계와 판매까지도 종적으로 연결시키는 계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술혁신이 가능해지게 되고 품질의 향상과 유통효율이 일어나는 등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계열화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마.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한국의 육가공산업은 1979년 돼지파동 이후에 겨우 태동하여 1980년대에 소수의 대기업들이 육

가공 제조업에 뛰어 들면서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아직은 육가공업이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개방화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고 위촉되는 농가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 산업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자조금제도의 도입

농업의 국제화의 상업화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국내외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때 축산업계도 앞으로는 자주·자립·자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발전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자조금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산업기금으로서 생산자의 자진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를 통해 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조금제도를 좀 더 전진적으로 발전시켜 정부의 출연금을 보태서 축산물의 수요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시도하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건간에 국제화시대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축산업계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지극처럼 절박하게 요구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양돈**